

News

더 이상 풍선효과 없다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초강수

연합뉴스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시장 예상보다 대폭 확대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

코로나19 반영? 4월 은행 연체율 소폭 상승

이데일리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나타나...3월 말 0.39%에 비해 0.01%포인트 상승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2%로 같은 기간 0.14%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57%로 3월 말(0.53%)보다 0.04%포인트 상승

우리금융, 우리은행 1조원 증자... "코로나 장기화 대비"

뉴시스

15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우리은행에 1조원을 유상증자하는 안건을 의결...출범 이후 최대 규모
우리은행 자본금은 3조3,800억원에서 4조3,800억원으로 늘어... 확보한 자금 일부분은 신규 자금 수혈이 시급한 케이뱅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

돈 들고와도 돌려보내는 은행... "규제에 멀쩡한 ELT도 못팔아"

매일경제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ELT 잔액을 조사해보니 33조3,000억원으로...금융위 규제 기준보다 1조1,000억원 많아...
주요국 지수는 37~44% 반등하면서 일부 ELT는 조기 상환 요건을 채웠고 잔액이 감소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여력 생겼지만 지난 3월 이후 ELT 신규 상품은 중

보험업계, 고용보험 의무화 '긴장' ... "보험설계사도 반기지 않아"

쿠키뉴스

정부 및 국회에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 9개 대상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놓고 보험업계 내 찬반 의견 갈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추진은 보험사에게 큰 부담...설계사들 입장에서라도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은 보험료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

'개인용 이동수단 정책' 갈팡질팡.. 업계 "50조 시장 날아갈라" 불만

디지털타임스

PM(Personal Mobility)기본법을 준비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PM을 운행하는 개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전을 거듭...
업계는 정부만 주시...PM의 법적 지위에 따라 주행가능한 도로부터 서비스 업체의 영업범위,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지기 때문...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한국경제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져...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 이달 말 발표...
①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②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③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1년새 85% 줄어든 ELS... '부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액은 1조3,7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9조730억원) 대비 84.8% 감소...
ELS 조기상환 규모는 더욱 위축...지난해 5월 7조8,276억원이었던 ELS 조기상환액은 지난달 1,136억원에 그쳐, 1년 새 무려 98% 넘게 줄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